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2. 9.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 안건요지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따로 붙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예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7년 2월 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관련법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2. 주요내용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5년
- 목표년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충청도 천안시 일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 면 적 : 3,598km² (대전시 540, 충청도 1,602, 충북도 1,456)

다. 주요내용

- 광역권의 목표와 전략
- 공간구조 등 기본구상과 부문별 계획 (광역토지이용계획,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광역교통 및 물류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 문화·여가 및 방재계획 등)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 및 관리계획

3. 검토의견

- 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중추 행정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자족도시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06. 1월 광역계획권을 지정 고시하고, 광역권에 대한 장기발전의 전략목표 설정과 공간구조의 개편, 토지이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시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안 세부내용을 보면,

- 금번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정하고 대전시 행정구역면적 540km² 전체를 포함한 충·남북 일원 3,598km²를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지정하였으며,

인구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2030년 행정도시건설을 전제로한 행정도시광역권 인구를 370만명~400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인구지표를 175만명~185만명으로 계획하였음.
- 공간구조와 개발축 설정에 있어서는 행정도시와 연기군, 대전광역시와 계룡시, 청주시와 청원군, 공주시, 진천군과 증평군의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행정도시에서 각각 공주방향, 계룡방향, 대전도심을 지나는 방향, 청주·청원을 지나는 방향 등 4개의 계획적 개발 축을 설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은 행정도시 배후 핵심도시로서 중앙행정 및 군사·국방, 과학기술 R&D, 금융·상업·물류 등 광역적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음.

- 교통축은 국가 및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과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로부터 대중교통체계 및 자동차전용도로구축, 행정도시 광역계획권내 대도시간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광역권내 첨단 BRT 구축, 거점도시간 순환간선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계획하였음.

부문별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용지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30년 최소계획인구 수용을 위해 237.61km², 최대계획 인구시 290.74km²의 도시화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시의 경우 최소 118.05km², 최대 147.67km²의 도시화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개발 수요발생에 따라 도시화 예정용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녹지관리 및 경과·환경보전계획은 행정도시와 금강, 대청호를 잇는 녹지관리체계 구축과 광역수변 생태축 형성등 Blue Network를 구축하고, 계룡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금강권, 대전관광권 등에 대한 경관자원을 발굴, 관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광역시설계획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운동장, 물류·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고,

상수도 1단계(6만톤/일)를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충남지역에 2개소, 충북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이 외에도 문화 및 여가계획,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대형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음.

이상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안 검토결과

- 우리 시가 지난 2006. 9월 수립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연도 인구를 200만명으로 확정된 바 있으나, 금번에 수립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최소 175만명에서 최대 18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의 장기발전 구상과 계획의 일관성 등을 감안한 적정 인구지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월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된 「제4차 시·도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맞추어 성북동일원의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금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현재 동구 구도동일원에 추진 중인 17만평 규모의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역시 금번 계획 중 물류·유통시설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 또한 광역시설계획에서 상수도의 경우 1단계(6만톤/일)를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단계(14만톤/일)도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을 계획내용에 담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광역권에 대한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